

해상법집행세력 운용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Hee Cheol, YANG

Ocean Policy Institute, KIOST

핵심용어 : 동해, 해상위협, 해경, 해상법집행

Key Words : East Sea, Maritime Threats, Coast guards, Maritime Law Enforcement

1. 서 언

국제적으로 약 142개 국가는 해양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약 74개 국가는 해경과 해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68개 국가는 해경만 보유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법을 집행하는 세력은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환경과 국가 수요 및 조직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 (중략)

해경의 기능적 발전에는 1982년 UNCLOS의 역할 또한 지대하다고 해석된다. UNCLOS에 의해 각국은 해양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국가의 기능적 팽창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경 세력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혹은 유사한 해상조직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환시켜 왔다. ... (중략)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해상법집행세력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일본 해상보안체제 강화 조치가 지향하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상법집행세력 운용 동향

해상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해경은 전투세력으로서의 해군이 아니며, 이들은 상황적 요구와 조건, 지휘통제 패턴 등에서 다르다. 따라서 해경은 때로 비용 경제적인 해군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전투세력인 해군을 대체할 수는 없다. ... (중략)

한반도 주변에서는 중국이 2013년 해상에서의 법집행세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기존의 해감총대를 해경국으로 변경하고, 공안부 소속의 해경과 중국어정, 밀수 단속국을 국가해양국 아래 해경국으로 통합하면서, 그 지휘는 공안부가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부 조직에만 있었던 경찰권과 무장력이 통합조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1948년 설립된 일본 해상보안청은 광역해양순시체제에 따라 1200해리까지의 광역 순찰과 구조활동을 진행하고, 자체 해양정보 구축은 물론 수로측량을 통한 해도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조직된 우리나라 해경은 기존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회복시켰으나, 주변국의 해상법집행 세력 및 기능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 (중략)

3. 일본의 해상보안체제 강화 방침의 주요내용

일본은 2016년 12월 12일 각료회의를 통해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방침은 도서영유권 해역 대응 및 해양감시체제 강화, 해양조사 대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 지역해 패권경쟁 및 해양질서의 적극적 개입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 (중략)

방침에서 외국 관공선과 어선에 의한 센카쿠(조어대) 열도 영해침범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 해양조사선 활동강화에 대한 대응은 일본이 주장하는 주변국과의 가상 중간선을 넘는 조사활동을 견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 선박을 포함할 수 있다. 동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다. 방침은 또한 태평양 외곽도서의 권익 침해를 적시하고 있는 바, 주로 중국어선에 의한 태평양 도서주변 진출사례, 동해와 일본 북동부 수역의 외국어선 진입 빈도 확대 등이 포함된다. 방침은 이러한 주요 위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체제정비를 요청하고 있는 바, 순시선 등의 재정비, 핵심해역 경계를 위한 관구별 배치운용 재검토, 정보감시 강화를 위한 통신체계 및 감시활동 강화, 자위대와의 역할 분담, 해양조사 강화, 기반정비 강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4. 결 론

지역해 긴장으로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법집행세력의 강화와 해양정보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한 경비세력 운용연계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First Author : ceaser@kiost.ac, 051-664-3720